

인도, 선주에 난파선 제거의무 부과 검토

일본 3월부터 난파선 제거보험 가입요구

소요비용 선주에게 부담시키는 방안 추진

일본이 오는 3월부터 난파선 등을 제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규제 등 일정한 제재조치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가운데 인도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방침으로 있어 보험회사들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로이즈 리스트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자국 영해에 좌초되어 있는 선박 등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선박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인도 항만에 기항하는 모든 선박은 의무적으로 이 같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인도 정부가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자국 연안 곳곳에 100척이 넘는 좌초선박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해양오염은 물론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도의 고아(Goa)주 정부는 포트 아과다(Fort Aguada) 근처에 4년 이상 방치되어 있던 침몰선박 리버 프린세스 호를 처리하기 위해 외국 해난구조업체와 19만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고아 주 정부가 지급한 금액은 비교적 적은 액수라고 밝히고, 일부 항만의 경우 항로를 가로 막고 있던 난파선을 제거하는데 수백만 루피가 들어간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

기 위해 해운총국의 국장을 의장으로 하고, 보험협회와 인도 항만협회 및 선주 협회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인도 항만을 기준으로 12마일 이내에서 선박이 난파되는 경우 선사에 대해 이를 제거하는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인도 정부 방침에 대해 보험회사들은 현재 항만수계까지로 되어 있는 보험 범위가 늘어나는 경우 책임이 그만큼 확대되는 점을 우려하여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험사들은 보험에 가입한 이후 선사들이 보험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경우 책임 소재를 밝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도의 법률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